

# 환경보호, 기술혁신 및 녹색 일자리 - 독일식 모델을 중심으로 한 고찰 -

Miranda Schreurs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환경정책연구센터 소장)

## ■ 머리말

독일은 녹색 일자리, 녹색 기술 및 녹색 경제 개발의 선두자로 부상했다. UN 보고서(*Green Jobs : Can the Transition to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Spur New Kinds and Higher Levels of Employment?*)에서는 독일의 환경관련 기술이 향후 수년간 4배 가량 증가하여 2030년경에는 제조업 산출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에 육박하고, 자동차 및 기계·기구 산업의 총 고용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독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미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고용은 25만 명에 다다르며 연간 2,4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 현재 대략 150만 명의 독일 국민이 환경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는 환경 및 청정 에너지기술 분야의 혁신이야말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현대화, 미래 독일로의 도약을 가능케 하는 수단으로 보고 환경보호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일국이 신기술혁신 개발의 선도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면 강력한 수출국으로서 그 입지를 다질 수 있으며 국제 생산 기준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시그마 가브리엘(Sigmar Gabriel) 독일 환경부 장관은 청정 기술혁신이 주도하는 ‘똑똑한’ 환경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미래는 친환경 시장의 시대가 될 것이며” 이미 독일은 친환경 녹색 기술의 최대 수출국이 되었다. 가브리엘 장관은 친환경 녹색 청정 기술의 수출 장려를 위해 녹색 산업 내각의 수립까지도 주장한다. 다수의 독일 대기업은 미래 경쟁력의 기반이 청정 기술 시장의 글로벌 리

더로서 자리매김하는 자사의 능력에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 독일의 녹색화 : 정치, 정책 및 대처방안

전 세계 각지에서와 마찬가지로 독일 역시 환경보호에 항상 적극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독일 산업 및 정부의 시각은 환경보호 대책이 엄청난 자원을 소모시키며 기업의 경쟁력을 위협하고 일자리를 소멸시키는 주범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짙었다. 이러한 견해는 1980년대 정가에 최초로 녹색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제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초석이 마련되기 시작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초반, 대중은 환경오염으로 인해 삶의 질이 악화되는 정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산성비로 인한 독일 산림 파괴가 가시화되자 이를 기화로 여론이 결집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1982년 말 녹색 정당이 총선에서 약진하며 의회 내 논쟁에 힘을 신게 되었고 더 많은 기성 정당이 환경적 사안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체르노빌 원폭 사건, ‘오존층의 구멍’ 발견 및 전 세계적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증대로 인해 이러한 전환이 한층 심도 있게 진행되었고, 1986년에는 독일 내에 ‘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부(the Ministry for Environment, Nature Protection, and Nuclear Safety)’가 창설되기에 이르렀다. 1990년대 초반, 기후변화가 국제적인 어젠다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독일은 환경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스스로의 위치를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보수 우파 정당인 기민당(Christian Democratic Union) 및 기사당(Christian Socialist Union)과 좌파 성향의 사민당(Social Democratic Party) 및 녹색당(Green Party) 모두가 친환경 녹색 정책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 독일 내에서 어떠한 환경 사안으로까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선의 지표이다. 사실 독일이 1990년 기준가격 의무구매제도(Electricity Feed-In Tariff : EFT)를 도입하며 유틸리티 회사가 개인 및 중소기업으로부터 신재생 전력원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헬무트 콜 총리(및 클라우스 뢰퍼 환경부 장관(1987-1994)) 시절이었다. 또한 Duales System Deutschland(DSD : 포장폐기물 대행 회사) 설립의 초석이 된 ‘포장 조례(German Packaging Ordinance)’를 도입하여 생산하는 포장재에 대한 각 회사의

비용 지불을 의무화하였다. ‘그린 닷(Green Dot)’ 시스템이라 불리는 동 시스템의 도입으로 애초에 포장재를 상당량 감축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포장재 폐기물의 양도 엄청나게 감량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포장재 폐기물의 사후 소비를 위한 분류 작업 및 재활용을 위한 자원 마련의 길을 터놓았다. 1994년 이와 유사한 시스템이 EU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며, 폐기물 관련 후속 법령에서는 제품 생산 시 독성 화학물질 사용 제한 및 배터리,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에 대해 규정하게 되었다.

## ■ 기후변화 : 위기와 기회의 양날

독일 정부는 이미 1987년 ‘앙케트 특별위원회(Special Enquete Commission)’를 설립하여 기후변화 제안서를 작성하였다. 1989년에 작성된 독일 정부 보고서에서는 개도국의 향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선진 산업국의 경우 20세기 중반까지 약 80% 가량 배출량을 감축해야 할 것이며, 독일이 유럽공동체 내의 주된 변화를 선도하고 이를 추진해 나아가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90년 6월, 서독 정부는 2005년경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87년 수준 대비 25~30% 감축할 것에 동의하였다. 독일 통일 이후 동 목표에는 변화가 있었지만 이 같은 행보는 독일이 EU 내 기후변화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하는 초석이 되었다. 교토 의정서 체제하에서 EU는 2008~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8% 감축할 것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책임 분산 차원에서 마련된 ‘EU 책임 분담 협약’에서 독일은 2008~2012년까지 1990년 수준 대비 21% 감축할 것에 합의함으로써 약체 EU 회원국의 일시적인 배출량 증가를 허용하여 EU 선진 회원국과의 경제 격차 해소의 숨통을 터주었다. 독일은 합의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여 2007년 말 1990년 수준 대비 20.4%를 감축하였다.

이후 ‘생태적 세제 개혁(에너지 소비세 부담을 늘리되 근로자의 납세 부담은 경감)’, ‘단계적 원전폐기법(신규 원전 건설 금지 및 기존 원자로의 단계적 폐쇄)’, ‘신재생에너지법(1990년 EFT의 성공적인 도입을 바탕으로 마련)’ 및 공세적 기후변화 정책 마련 등, 주요 정책 변화는 1998년 총선으로 형성된 ‘적녹연정(Red-Green Coalition)’이 주도하였다.

생태적 세제 개혁에서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 기반해 전기 소비세를 부과하고 석유 및 천연가

스(사민당과 석탄산업과의 긴밀한 관계로 인해 석탄은 대상에서 제외됨)에 대한 세금을 증대시켰다. 석탄 및 석유 의존도 감소 및 원자력 에너지의 단계적 폐기를 결정하면서 신재생에너지원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계획 마련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2000년 마련된 신재생에너지법에서는 전기 시장에서의 신재생에너지원 점유율을 2010년까지 현재의 5%에서 10%로 2배 늘릴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동 목표량은 신재생에너지원의 EU 차원(EU지침 2001/77/EC)에서의 개발 및 신재생에너지원 개발이 독일 산업계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일반적 인식의 고양으로 인해 2009년 1월 발효한 개정법에서는 그 기준이 더욱 강화되어 전체 전기 부문에서의 신재생에너지원의 점유율을 2020년까지 30%, 2030년경까지 50%까지 확대하기로 규정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법(2001)이 규정한 목표량 달성을 위해 ‘태양열 지붕 10만개 설치 계획’이 실시되었으며, 동 법(개정)에서는 20년의 보상 기간 동안 의무구매 기준가격을 고정하고 이후 진입하는 신규 업체에 대한 효율을 낮추며 특히 태양광, 해상 풍력 및 바이오 매스에 대해 우호적인 가격을 설정하고 있다. 유틸리티 업체는 소비, 산업 혹은 주거 등 전기 생산업체의 분야를 막론하고 상대적으로 비싼 신재생에너지원을 원료로 하여 생산된 전기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상기 정책은 총체적으로 독일 에너지 부문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으며 원자력 및 화석 연료 의존도를 점차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2005년 부임한 이후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사민당 및 녹색당 연정이 입안한 환경 및 에너지 입법안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유의미한 정책 목표 및 계획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2007년, 독일 정부는 2020년까지 자국 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 감축할 것을 공식 발표하였다. 같은 해 7월 하일리겐담(Heiligendamm)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메르켈 총리는 미국이 2012년 이후의 전 세계 행보에 대한 UN을 매개체로 한 합의 형성과 더불어 기후체계 변화가 예견되면서 극심한 기후변화 및 해수면 상승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 2050년경까지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섭씨 2도 상승하는 것을 제한하는 전 지구적 계획의 수립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2007년 4월, G8 정상회담 준비 회의에서 독일 환경부는 ‘기후 어젠다 2020’을 통해 원자력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0% 감축하기 위한 8개 계획을 발표했다. 동 계획에서는 에너지 효율성 및 신재생에너지원의 활용률 개선과 낙후 시설의 개축 및 탄소 격리·저장에 대한 투자를 통한 전력발전소의 배출량 감소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2020년까지 전기 부문에서의 신재생에너지원 활용률 27% 증대,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열 생산, 열·전기 혼합 생산

량을 두 배 증가, 건물 현대화 및 효율적 난방 시스템 도입을 통한 열 소비 감축, 에너지 효율성 11% 증대, 나아가 운송 부문의 효율성 및 신재생에너지원 사용 증가를 추구하고 있다. 승용차량 및 화물 수송뿐만 아니라 항공 및 선박 운송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여러 정책이 마련·작성되고 있다. 독일 환경부에서는 이들 계획의 개시 비용으로 2010년까지 약 30억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비록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독일 정부는 이 비용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의 기후변화 현상을 방관하였을 때 발생할 비용보다 낮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독일경제연구소에서는 이 비용을 2050년 기준 11억 5천만 유로로 추산한 바 있음).

또한 2007년 봄, 독일 대통령 주재하에 열린 회의에서 EU회원국들은 2020년까지 EU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의 20%까지 줄이고 에너지 효율성과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의 신재생에너지원 활용률을 각각 20%씩 늘리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2020년까지 연료 포트폴리오에서 바이오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10%까지 늘리기로 하였다. 주목할 점은 동 계획에서 이러한 목표 달성이 결코 녹록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정을 실행하려면 산업사회 발달의 대약진이 요구된다. 이들 목표는 2050년경 현재의 65억 명에서 90억 명을 넘어서게 될 세계인구 규모를 감안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적절히 공급하기 위해 산업사회를 근본적으로 구조조정해야 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50%까지 감축해야 함을 의미한다.

## ■ 녹색 일자리 성장

독일의 친환경 녹색정책은 이제 그 빛을 발하고 있다. 2004년 독일은 세계 최대의 환경 관련 기술 수출국으로서 이미 미국을 앞질렀다. 연방 환경청의 의뢰로 로워 색소니 경제연구소 (Niedersächsische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가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독일은 2006년 전 세계 환경기술 수출의 16%(560억 유로)를 차지했으며 이에 비해 미국은 15%, 일본은 9%를 각각 차지하였다. 특히 측정, 통제, 규제, 수자원 및 폐수처리 기술, 청정 대기 기술, 소음 보호 및 재활용 부문에서 국제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독일 최대의 환경 수출 분야는 열 용량 측정기구 등의 측정 및 통제 기술이지만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수출 부문은 신재생에너지 분야로서 연평균 성장률이 2000년대 중반 25%에 육박할 정도였다. 2007년 ‘잠재적 환경 재화(환경보호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재화이나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음’의 수출량은 600억 유로에 육박했으며 이는 전기공학 산업의 수준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다. 토마스 홀츠만 독일환경청 부청장은 “강도 높은 전도적 환경정책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성공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규 요건으로 일부 요구되었던 기술적 성공에 힘입어 독일 산업계는 국내적인 기술 성공을 국제적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독일연방 환경부는 나아가 2006년 독일 업체의 ‘재활용 및 효율성 기술 수출 이니셔티브(Export Initiative Recycling and Efficiency Technologies)’를 통한 국제 시장 진출 장려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독일 환경부와 경제부는 합동 포털 사이트(www.cleaner-production.de)를 만들어 독일 환경 기술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독일연방 환경부와 연구부는 2008년 11월 긴밀한 공조를 통해 내각의 ‘환경기술 마스터 플랜’ 결정을 이끌어냈다. 동 플랜에서는 정책입안자의 독일 산업계의 환경기술 수출지원 방법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우선 강조되는 세 분야는 수자원, 원자재 및 기후변화이며, 연구 자원 마련, 신기술 응용의 이전 및 확산, 교육 및 훈련 증대, 중소기업 혁신지원, 특히 국제적 공조의 장 마련 등이 마스터 플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특히 성공을 거둔 수출 분야는 폐기물 재활용이다. 독일은 선진폐기물 재활용 및 처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국내적으로 75%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등 현재 전 세계에서 최고의 재활용률을 자랑하고 있다. 동 분야 6천 개 이상의 업체에서 20만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미 폐기물 관련 국제 생산시장에서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달한다.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분야가 신재생에너지이다. 2007년 동 부문의 매출은 약 250억 유로였으며 최대 매출을 올린 에너지원은 바이오 매스와 태양력 및 수력이었다. 2007년 현재, 독일 총 전기 소비의 14.2%, 전체 에너지 사용의 8%가 신재생에너지원에서 충당되고 있으며 독일 전력 생산을 위해 설치된 풍력 터빈은 19,460개로 최대 생산량은 22,247 메가와트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리더로 부상하면서 독일의 신규 고용의 기회도 함께 늘어났다. 독일 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 수는 2004년 160,500개에서 2007년 249,300개로 급등하였으며 독일 정부는 2020년까지 이들 일자리 수가 40만 개로 늘어날 것이라 전망하였다. 시그마 가브리엘 독일 환경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체계적 확대는 환경 및 기후정책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독일의 혁신, 성장, 고용의 측면에서도 선순환을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다양한 주체에 의해 혁신 및 ‘후 카본(post-carbon)’ 경제로의 기술적 전환 장려의 수단으로서 기후변화정책 지원이 급

증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세적 기후변화정책 추진에 대한 이견을 좁힐 수 있었다.

2008년 3월 발간된 독일 환경부 보고서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녹색 일자리 증가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녹색 일자리 수는 2004년 160,500개에서 2007년 249,300개로 급증했으며 그 중에서 134,000개는 독일의 신재생에너지법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이들 일자리 중 39%(2007년 기준 96,100개)가 바이오 매스 분야에서 창출되었다. 더욱이 2004년 6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던 수력 분야의 경우 2007년 84,3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으며 수력발전 기술의 수출 규모도 2007년 기준 57억 유로로 성장하였다. 2007년 기준 창출된 신규 일자리 수는 태양력 부문 38,600개, 지열 부문 4,200개, 수력전기 부문 9,400개, 신재생에너지 연구 및 과학기구, 정부출연 공공기관의 경우 4,300개이다. 충분히 교육 받은 노동력의 공급 확보를 위해 독일 정부에서는 2006년 말 ‘환경이 미래이다(Environment Creates Perspectives)’ 라는 이니셔티브를 마련해 녹색 일자리 구직을 위한 개인별 교육을 구상하였다.

## ■ 독일 모델의 세계적 함의

녹색 일자리에 대한 독일식 접근법은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마틴 야니케(Martin Jänicke)는 환경 혁신 도입에 대한 유럽 전역의 움직임을 메가 트렌드이자 경제적 성장과 에너지 및 자원 사용의 분리 가능성을 나타내는 징후라고 표현하였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과거 수년간 국제적으로 환경 선진국이라기보다 환경 혁신의 방해꾼을 자처했던 미국에서도 목도되고 있다. 투표구에서 선전을 거듭하던 오바마(Barack Obama)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미국의 기후변화 협상에서의 적극적 참여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한, 배출권 거래제도 실시, 2020년경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대폭 저감 및 2050년까지 80% 감축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더욱이 기후변화 현상 완화를 미국 경제의 걸림돌로 틀 짓기보다 미국의 안보 증대 및 수백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묘사하고 있다. 2008년 11월 21일, 오바마는 일종의 녹색 뉴딜 정책인 ‘경제회복계획(Economic Recovery Plan)’의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금융위기의 시대에 미국이 당면한 문제를 기피하기보다는 미래에 투자함으로써 늪에 빠진 경제를 다시금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러한 오바마의 공언은 실로 놀라우며 분명 그동안 독일이 보여

주었던 행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2개년 계획이 전국적으로 실시될 것이며 이를 통해 경제 근간을 튼튼하게 만들고 경제성장의 바탕을 구축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너진 도로와 교각을 재건하고 의무교육의 실패를 자초했던 학교를 현대화하며 풍력발전소와 태양열 패널을 설치하고 연비 효율적 자동차 및 대체에너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할 것이며 이를 통해 향후 해외 석유의존도를 줄이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굳건히 다질 것입니다.”

조셉 바이든(Joseph Biden) 부통령 지명자는 ‘아폴로 에너지 프로젝트’와 ‘녹색 칼라 일자리’를 미국이 경쟁력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미래로의 지름길이라고 언급하였다(바이든 상원 의원의 기후변화에 대한 의견 참조; <http://biden.senate.gov/imo/media/doc/BidenRecordClimate.pdf>). 주목할 것은 이러한 의견이 바이든 부통령 지명자의 최근 행보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이미 환경유권자협회(League of Conservation Voters; LCV)로부터 상원 활동 35년에 대해 ‘일생 환경 점수’ 85점을 받은 바 있다.

대선 기간 동안 오바마와 바이든은 ‘신재생에너지 종합계획(comprehensive New Energy for America program)’을 마련하였다. 동 계획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규 일자리 500만 개 창출
- 청정에너지 미래 구축을 위한 민간의 노력을 경주시키기 위해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 투자
- 2015년까지 플러그인 수소연료 차량(꺾론당 주행거리 150마일) 100만대 양산
-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기 생산 비중 2012년경 10%, 2025년경 25% 확보
- 배출권 총량거래제도(cap-and-trade program)의 경제적 실시를 통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80% 감축
- 2030년경까지 신축 건물의 탄소 비배출화를 목표로 한 ‘건축 효율성 비전’ 수립
- G8 회원국 및 브라질, 중국,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를 포함하는 글로벌 에너지 포럼의 창설
- 청정 석탄 기술개발 및 응용

이들은 또한 연료 경제 규범의 증대 및 차세대 친환경 차량 구매에 대한 7,000달러 세제 혜택, 전국적인 저탄소 연료 규범의 수립, 기존 석유 및 가스 개발권에 대한 ‘사용이 곧 고갈(use it or lose it)’이라는 접근방식의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현재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나 미국의 민심이 원자력 에너지로 회귀할 것인지의 여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원전 건설의 재원을 담당할 주체가 나타날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영향은 미국 각주 차원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아놀드 슈왈제네거 주지사는 2008년 11월 기후변화에 대한 주지사 모임을 주재하고 각주 주지사와 유럽공동체 및 중국, 인도, 멕시코, 브라질 대표를 초대하여 기업과 정부의 환경 파트너십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짐 도일 위스콘신 주지사는 “이와 같은 파트너십을 통해 금전적으로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계 안보를 확고히 할 수 있으며 대기 및 수질 개선을 결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캐서린 지벨리우스 캔자스 주지사는 “미국 경제를 본 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는 엄청난 기회는 다른 아닌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청정 기술개발의 글로벌 리더로의 도약에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찰리 크리스트 플로리다 주지사는 “영국 및 독일과의 파트너십 구축이 있었기에” 기후변화에 대한 플로리다 주의 발전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금융위기의 타격으로 전 세계가 고전을 금치 못하면서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독일, 노르웨이 및 EC가 후원하는 UNEP의 새로운 구상인 ‘녹색경제 이니셔티브(Green Economy Initiative)’에 대해 전 세계 공동체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하였다. 동 이니셔티브는 21세기 고용 붐을 일으키기 위해 세계경제의 녹색산업 혁명으로서의 방향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다. 녹색 뉴딜정책의 수혜자가 될 산업 부문으로는 청정에너지 및 청정기술(재활용 포함), 농촌/지방 에너지(신재생에너지 및 지속 가능한 바이오 매스), 생태계 인프라, 지속 가능한 도시(도시계획, 운송, 친환경 건축 포함)이 손꼽힌다. 반기문 사무총장의 발언은 그동안 독일에서 주장되어 오던 논의에 대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정부의 역할은 실로 막중합니다. 올바른 정책이 입안되고 글로벌 프레임워크가 형성되어야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에 비견할 만한 경제성장 및 저탄소경제로의 방향 선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금융위기 대처 방안을 적절히 실행한다면 기후변화 방지 노력을 재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즉 오늘날 세계가 겪고 있는 위기 속에 내일의 기회, 즉 일자리 및 성장이 척도가 되는 경제적 기회가 자리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KLI**